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 배출 감축대책" ('07)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고, 특히 농가수는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 물 량 : ('06)261만톤 → ('07)202 → ('08)146 → ('09)117 → ('10)107(△9.3%)
 (농가수) : (2,275호) → (2,018) → (1,531) → (1,204) → (974)(△19)

-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②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③ 축산·경종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2010년 현재,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백만톤이고, 이중 ① 40.3백만톤(87%)이 퇴비·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② 4.2백만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고, ③ 1.1백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기타 2%는 퇴비·액비 제조시 자연감모량)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경남 북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년 4월까지 전체 해양투기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톤당 15~20천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20% 수준에 불과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현지에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내년도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해양투기

농기별 특별 관리

정부합동 TF를 구성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자 적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행정·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 TF구성 : 총리실(주관), 농식품부·행안부·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해양투기 농가(974호)에 대해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10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일 3,600톤(연간 가동일수 300일 기준) 수준의 처리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존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가동률을 높여 1일 4,750톤 수준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축분뇨 생산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규처리시설 : 1일 3,900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 기존시설 가동을 제고 : 1일 850톤(8490톤→9340, 공동자원화시설 등)

셋째, 해양투기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가축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컨설팅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하는 「119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난 5.26일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해양투기 농가별 감축수단에 대한 현실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동시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검사본부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지자체 가축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 사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1.6.16일 밝혔다.

-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6월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약6개월간 운영('11.6.16~12.3)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매물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697개* 가축 매물지를 대상으로 해당 매물지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 현장출장·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중점관리 매물지: 정비보강 매물지(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물지 417개소),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물지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중점관리 매물지에 대하여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물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 매물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가축 매물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

축산과 '산림' 이 만났을 때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목·잔디 이용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산과원)은 오는 17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수원 소재)에서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목 및 잔디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

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기관, 산업체, 학계의 자연순환 농업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림 속성수, 밤나무, 골프장 잔디 재배분야에 있어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기술의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그 동안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목 및 잔디분야 이용기술 개발은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으로 본격화 됐는데, 화학비료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농경지 이외 분야에서의 대량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가축분뇨 액비를 속성수(포플러, 백합나무)에 이용하면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1.6배 정도 증가하고, 밤나무의 경우 수확량과 품질면에서 화학비료와 대등해 화학비료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 식재된 한국잔디와 한지형잔디의 경우 화학비료에 비해 품질과 생육이 좋고 질병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약 2,500ha 면적(산림청, 2005년 기준)의 잔디 재배농가로의 이용확대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품질 좋은 가축분뇨 액비가 수목 및 잔디 분야로 이용이 확대된다면 축산과 산림이 연계된 자원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도 클로렐라(chlorella)와 친해진다!

농촌진흥청, 면역력 9%, 체중 6% 개선

앞으로는 가축도 클로렐라로 건강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면역력을 높여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인 클로렐라를 가축의 사료첨가제로도 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클로렐라(Chlorella)는 민물성 녹조류(綠藻類)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로서 단백질, 엽록소,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플라크톤의 일종이다.

현재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 때문에 인체용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식품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클로렐라는 회수, 안정화 농축 및 건조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 축산분야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2차 배양이 끝난 클로렐라를 가축에게 유용한 미생물균주와 부형제를 혼합 발효시켜 수분을 줄여 즉시 사료 첨가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람이 먹는 클로렐라보다 1/10 이하로 가격을 낮췄다.

이번 개발된 클로렐라 함유 사료첨가제를 육계(肉鷄) 사료에 0.1~0.5% 수준으로 섞어 급여해 본 결과,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사료요구율 8%, 면역력 9%, 체중 6% 개선되었으며 항생제 처리구와 비교한 경우에도 사료요구율 9%, 면역력 1.8%, 체중 2% 개선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클로렐라를 급여한 닭의 경우 사료는 적게먹고 출하일령도 2일정도 앞당겨져, 육계 5만수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서옥석 가금과장은 “오는 7월부터 가축사료 내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질병이나 생산성을 걱정하던 축산농가에 클로렐라 함유 사료첨가제 보급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클로렐라 생산 시 발생하는 클로렐라 가공 부산물을 사료화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녹조류를 축산분야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녹조류를 함유한 사료 첨가제를 개발해 특허 출원하고 기술이전 한바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우리 농식품 전문가 양성 배출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수료식 개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는 22일 수원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2011년도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4개월여 과정을 마친 수료생 127명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관, 농식품마케팅대학 총 동창회장단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료식은 수료생들

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평회 및 특강, 시상식, 만찬 등 3부로 진행되며, 식전에는 하영제 aT 사장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달성 전략’ 특강을 실시한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농산물 유통·식품전문가 육성을 위해 개설된 aT 농식품마케팅대학은 분야별 전문가(농산물마케팅전문가, 식품산업글로벌리더, 외식산업글로벌리더, 농식품수출리더) 1,400여명을 양성하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일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산물 CEO MBA 및 고부가 식품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교육생들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현장기술·토론 및 경영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남상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원장은 우리 농식품의 장래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며” 실전형 교육을 통한 농식품의 과학화·산업화로 농식품 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가공·유통 심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본·지원 심사관을 대상으로 6월 24일에 가공장 및 유통단계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가공 및 유통단계의 심화교육은 각 업종(품목)별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이해 및 본·지원간의 심사 표준화와 식육판매장 시설 기준 및 미생물 실험에 관한 심도 깊은 교육도 실시하였다.

앞으로, 기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사관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와 심사 표준화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신임 축산정책관에 권찬호 경북대 교수 임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축산정책관에 권찬호 교수(경북대 축산학과·사진)를 임용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축산정책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임용된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대학에서 조사로 생산 및 이용, 축산경영, 가족의 사양 관리, 유기농 축산, 자원순환형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밀착형 연구를 해왔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그는 평소 축산업이 안고 있는 질병문제, 가축분뇨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으며, 우리나라 축산에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